

서평

經濟地理學再考 - 經濟循環の「空間的組織化」論による統合 -

(경제지리학 재고 - 경제순환의 '공간적 조직화'론에 의한 통합 -)

加藤和暢(카토 카즈노부), 2018, 京都: ミネルヴァ(미네르바)書房, 378쪽.

韓柱成\*

일본의 경제지리학은 경제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지리학의 식견에 의거한 고찰을 중시하는 학통으로 갈라져 발전해 왔지만, 이 책은 양방향 학맥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지리학계에 등장한지 약 40년 동안 실증적·이론적 면에서 연구 성과를 착실히 쌓아 온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을 경제순환의 공간적 조직화론이라는 견지에서 K. Polanyi의 사회와 시장의 '이중운동론'<sup>1)</sup>에 의해 재구축함으로써 두 계열 논의의 병존이라는 경제지리학 연구방법의 고민을 타개하려 했다.

이 책은 序章을 포함해서 경제지리학의 기본문제를 I부의 5개 장에, II부의 국토정책론의 재구축에 5개 장을, 그리고 終章 및 附論 2편을 합쳐 모두 13개 장으로 구성했으며, 5개 장에 補註와 附論 解題가 붙어 있다. 그리고 내용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고 학회지나 기관지 등에 발표된 논문들로 가필·수정한 것이다.

먼저 서장[경제지리학을 위해]에서 경제지리학의 학문적 사명은 사회경제시스템의 시간적 전개로 변이하는 공간질서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지리학을 대표하는 학설인 국민경제의 지역구조에 대해 언급을 하며 이론적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戰前의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 간 관

계<sup>2)</sup>를 나타내는 '지역적 편제론'과는 通奏低音을 나타내면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을 개척한 이론적 지평을 새로운 방법론의 기초로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을 종래의 논의로부터 질적으로 구분할 징표인 지역인식의 혁신을 명확히 내세우지 않았고 경제순환 접근방법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지역구조의 시장사회에서 지역의 양면성인 '시장지역'과 '지역사회'의 복잡한 교차에서 '지리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설사적 주류인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은 학설의 도달점이 아니고 하나의 경과점으로서, 시장사회에서 지역은 '자본의 공간적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변용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면서 지역구조론은 지역이나 산업이라는 개념에 철저한 이론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민경제의 시각과 지역적 시각의 통일을 꾀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구조론의 전개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장지역과 지역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Polanyi의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이 유효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매개로 두 시각을 통일시키는 이론적 재구성이 이 책의 시도라고 했다. 그리고 지역구조론에서 지역의 파악은 입지와 순환이라는 이원론적 구성에서 경제순환의 현실적 과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정이 그려내는 지리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소득기회’, ‘소비기회’, ‘공동생활기회’를 위치지운 경제순환의 ‘공간적 조직화’론으로 이론적 궤도를 전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시장지역 편제에서 중핵이 되는 기업 입지를 규정짓는 것은 소득기회로, 기업입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수확체증의 공간형태라고 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은 사회과학의 세 가지 연구, 즉 ‘원리론(유형화된 사용가치생산)’, ‘발전단계론(상인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현상분석(제 현상의 지리적 차이, 지리적 관련, 지리적 질서·구조)’의 3단계로 분석되는데, ‘현상분석’의 주역은 지리학으로서 경제지리학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리적 현실’을 무엇 의미로 중요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가했으면 한다.

제1부 경제지리학의 기본문제에서 제1장[지역구조론의 새로운 전개 - 경제순환 시점의 재검토를 향해서 -]에서는 지역구조의 이론적 틀을 사회경제시스템의 새로운 시장사회에 대한 지리적 현실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지역구조론 중에서 경제의 지역적 순환은 가와지마(川島哲郎)의 학설을 계승했다고 하며, 이는 산업구조론적 전망(perspective)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

산업구조론적 전망의 의의와 문제점에서는 실체론적 지역파악에 대한 반성으로 이미 지역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며, 그것은 ‘자본의 공간적 운동’으로 변용을 꾀한다는 입장에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이 상대적으로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이라고 비판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민경제의 양상이 변용되어야 하고, 지역의 실재가 과정적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지역구조론을 종래의 산업구조론적 관점에서 조직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신전개의 방향성으로서 O.E.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산업공간에서 기업공간으로의 전환, 글로벌화와 서비스화로 국민경제 지역구조론의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제2장[경제지리학 ‘이론’에 대한 고찰 - 그 위치 지음을 놓고 -]의 일본 경제지리학 이론의 성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경제학 분야에서는 국민경제적 시각에 입각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간경제론, 국민경제적 시각이 전면에 대두되었으며, 지리학의 세계에서는 고도경제성장으로 국민경제적 시각에 관심이 차츰 높아져 지역구조 연구회가 결성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적 시각의 정착화를 원활하게 견인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지역구조론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적 시각과 지역적 시각을 통일시키는 것이 과제였는데 이를 모색한 야다(矢田俊文)의 지역경제론은 두 시각에서 Polanyi의 시장과 사회라는 이중운동으로 통일은 불가결하다며, 이것이 경제지리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학과 지리학의 존립근거에 대한 내용, 방법과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대상은 경제학, 방법은 지리학이지만 결국 이론은 경제학의 것이라는 점이 경제지리학의 난제라 했다. 그리고 이론과 실증을 결합시키는 경험적 이론으로서의 지역구조론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제3장[미완의 프로젝트로서 지역구조론 - 시장사회에서 공간적 조직화의 구도 -]에서 저자는 국민경제의 지역구조에서 제기된 지역인식의 혁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철저한 형태로 경제지리학의 분석 틀을 재검토하고, 시장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통합인 지역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시도, 이를테면 존재론적 고찰을 정리한 것이 지역구조론이라 했다. 그리고 지역의 생성논리를 국민경제 순환의 공간적 분기로 완결시키는 것을 공간적 조직화라고 하고, 경제순환 시점에서 부분과 전체의 의미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구분해 국민경제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했다. 또 경제순환의 완결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산업지역과 경제권의 정합에 대해 ‘과정적 실재’라고 하면서 완결성의 기준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역구조와 지자체경제론의 비교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Polanyi의 이중운동론에 대해 시장사회에

서 지역이 가지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과 같이 시장지역을 적극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그것에 지자체경제론이 중시한 지역사회에 의한 자기방위<sup>3)</sup> 요인이 겹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장지역 생성의 계기를 소득기회, 소비기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비상품 경제적(비시장적) 요인을 핵으로 한 공동체의 3자를 ‘공간적 조직화’로 시장지역에서 인간생활이 공간적 통합을 해 지역생성의 과정을 정리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득기회와 소비기회로 이루어진 시장지역은 시장사회의 지역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비상품경제적(비시장적) 요인의 핵인 공동체의 3자가 공간적 조직화를 통해 시장사회에서 인간생활의 공간적 통합인 지역이 생성되어 가는 순서를 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득자, 소비자, 공동생활자의 세 측면에서 공간적 통합의 유동화를 시키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비용절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에 주목했다. 그렇게 소득자, 공동생활자로 공간적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인 공간조직(spatial organization)<sup>4)</sup>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서비스 경제화의 지리학]에서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사회에서 경제적 조직화의 형태를 변모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서비스는 저장이나 수송도 할 수 없으며 제3의 거리극복 양식(mode)으로서 통신을 들고 이들 세 가지의 관계를 공간 축으로 통신을 X축에, 시간 축으로서의 저장을 Y축에 이들 간의 관계에서 대각선을 수송이라 정리했다. 서비스업은 인정가능성(identifiability)과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의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회적 교환의 의미가 강하고 경제지리학에서의 究明도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자 중심사회와 서비스 중심사회를 구분했다. 공간

조직화의 3계기와와의 관계에서 19세기까지는 시장사회 이전으로 비시장영역에 있던 3계기가 시장사회로 됨에 따라 공동생활기회만 비시장영역에 존재하고 소득·소비계기는 시장영역에 등장했다고 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서비스 중심사회에서는 소득계기와 소비계기가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변화된 공간적 조직화에 의해 설명하면서, 이것이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에 결여된 요소라며 지역생성 윤리를 설명했다. 그러나 왜 서비스 경제화로 지역구조론의 지역생성윤리를 설명하는지, 또 시장사회의 1단계와 2단계의 도형형태상 구분의 애매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2단계에서 내구소비재의 소비증대라고 표현을 했으면 하는데, 이는 그림 5-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경제순환의 공간조직화와의 관련성은 서술하지 않은 채 경제순환의 공간적 조직화만을 설명해 연결 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5장[생산의 지리학]을 넘어 - 서비스 경제화가 지리학에 묻는 것은 무엇인가? -에서 서비스의 경제화는 지식산업에 견인된다고 하며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공업사회에서 탈공업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엔진은 기술혁신이고, 탈공업사회의 내용은 지식의 생산을 핵으로 한 지식사회이고, 정보화는 초산업화, 서비스화는 탈산업화(반산업화)라는 二重基調를 소개하면서 일본경제지리학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경제화를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사회의 이중구조라고 하며, 정보화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시대변혁의 특징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비스 사회는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급성장한다고 했다.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지리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며 제4장에서의 공간적 조직화 여러 국면의 제2판을 제시했다. 다만 제1단계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사회라고 하며, 제2·3단계는 탈자본주의 과정이라 새롭게 표시하고 공동체기회와 소비기회

사이에 대체성이 존재하는 중간지대로 표시했다. 그런데 제4장의 공간적 조직화의 제 국면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제4장과 제5장은 서비스 경제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화가 지방활성화에서 글로벌 경제화로 나아가는 물 닻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경제적 순환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지역을 만들어 내는 관계, 지역 간 관계라는 3중 관계에 착안해 지리적 현실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제Ⅱ부 국토정책론의 재구축에서 제6장[거시적 공간정책]으로서의 국토정책 - '경계 없는 경제'의 역사적 위상 -]에서는 플라자 합의<sup>9)</sup>와 현대자본주의의 공간적 틀로서 국경 없는 경제,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nationalism), 전후 케인즈주의적 경제운영, 거시적 경제정책에서 국토정책이나 지역개발의 공간정책 정착화와 정책의 편입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인 사정에서 거시적 공간정책의 성립과 전개를 설명하고, 그것이 변용하는 전기와 통제적인 정책수단을 제도적 또는 기능적으로 실효시켜 케인즈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국경 없는 경제가 등장함으로써 공간론적 접근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제7장[정책현상으로서의 지역개발 - 방법론적 재검토에 관한 각서 -]은 지역개발의 방법론적 재고에 관한 내용으로, 정책론적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가 경험한 고도성장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의 확대, 공해·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지역개발에 기대하는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여기에 일본의 지역개발연구는 투자효과분석을 위시한 전략적 연구와 과소·과밀, 공해의 심각성을 계기로 삼아 각 지역 주민운동의 정치적 요청에 대응한 연구, 그리고 혁신지자체의 희생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지자체경제론의 구축을 겨냥한 지역과학에 입각한 것과 지자체경제론 계열의 두 潮流가 전개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지역개발론 연구는

실천적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며, 이에 봉착한 어려운 점을 '기대'와 '기대파악'이라 지적하면서 '실천적 요구'에서 출발한 연구스타일에 내재된 세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실천적 요구의 기초로 분석을 추천한' 연구스타일의 전환에서 절대주의적 정의로서 지방문제와 상대주의적 정의로서 문제지역을 설명하고, 이를 '정책현상으로서의 지역개발'이라 했다.

제8장[‘국토정책’연구에 있어서 경제지리학의 역할 - ‘구조-문제-정책’ 도식에 의한 지역구조론의 확충 -]에서는 정책론을 겨냥한 논의에 반성하고 저자가 企圖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먼저 사회적인 지역문제로 의식된 국토정책을 연구하기에 앞서 정책론 연구의 현상을 전망적·회고적 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전통적인 정책론 연구의 구도와 전망적인 정책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망적인 정책연구가 간과한 점을 정책과학 연구의 융성, 전망적 정책연구의 논리적 난점(aporía), 정책문제 파악의 곤란성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경제지리학을 거꾸로 비추어 볼 경우 종래의 연구에서 나타난 맹점, 問題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문제군에서 선택된 문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식화 했다. 그리고 구조-문제-정책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국토정책연구에 경제지리학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구조분석의 사거리에서 국민경제의 지역적 분업체계라는 거시적 공간구조를 설명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제군에 주목해 문제→정책→구조라는 회고적 정책연구에서 지역구조 파악의 입체화를 살펴보았다.

제9장[전후 일본에서 국토정책 전개의 초기조건 - ‘개발주의’대 ‘무역주의’ 논쟁이란 무엇일까? -]에서는 먼저 일본의 국토정책 전개과정을 자원개발기, 산업기반정비기, 지역격차 시정기로 정하고, 각 시기에 실시된 제도를 설명하며 국토정책의 이념과 현실이 다르다는 논의가 일상적으로 행해졌다고 했다. 이면에서 가와지마의 ‘철저한 산업정책’설에 대해 지역

개발정책이나 산업입지정책은 현실적으로 다른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역개발정책 일반으로부터 이탈과 왜곡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탈과 왜곡의 실태를 설명하고 종래연구의 공백(missing chapters)부분에 대해 서술했다. 또 패전 후의 일본 경제, 즉 긴급피난적 자급화의 전개에서 인적피해, 국부자산의 전쟁피해로 악성인플레이와 식료위기 등 경제위기의 심각화와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긴급개척사업으로 식량 확보와 식민지 상실 등 환경의 격변으로 석탄 산출과 노동력 확보, 반공의 방벽 등으로 긴급피난적 자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다음으로 부흥궤도를 겨냥한 논의의 경우, 즉 주류파의 견해인 개발주의에서 무역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재건의 기본적 방향은 경제의 민주화와 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업문제와 무역문제를 관련지어 설명했다. 또 개발주의에 대해 무역주의 논쟁의 핵심은 경제재건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사정이었다고 하며, 합리적인 고용수준의 유지, 생활수준의 향상, 국제수지의 균형을 지표(Merkmal)로 한 경제자립의 달성이 공통점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역주의가 일본경제의 부흥궤도에 정치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부의 유산(비싼 석탄가격문제, 농업의 저생산성)'으로 일본에서 경제정책, 특히 국토정책의 전개방향을 이후 크게 규정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의 유산'에 의해 규정된 국토정책의 전개방향은 1960년대 이후 무역주의가 철저한 산업정책으로서 국토정책과 연결해 갔다고 했다.

제10장[전후 고도성장기의 입지정책 - '전국종합개발계획' 시동의 배경을 읽다. -]에서는 전후 입지정책의 요람기, 태평양벨트 구상의 등장,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시동기, 입지정책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따라잡기(catch up)형'<sup>6)</sup>을 축으로 고도경제성장기의 입지정책을 시기별로 재고했다. 일본의 입지정책은 1930년대 이후 수립되었고, 이 때의 군수공장은 공습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지대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하였다. 그 후 국방상의 목적은 그 의미를

잃고 기존의 4대 공업지대에 애로사항이 나타났고, 자원개발은 6.25전쟁 特需로 산업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화학공업과 고차제품의 생산으로 과학기술청 자원조사회(공업입지소위원회)에서 발간한『공업의 근대화과 입지』에는 일본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입지문제에 예리한 실증분석을 행해 매우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태평양벨트 구상은 공업입지소위원회의 아이디어이고, 국민소득배증계획에 의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시동기에서 1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키타무라(喜多村治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점개발구상으로, 이는 태평양벨트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복잡하게 교착시켜 '신산업도시'의 지정을 가져오게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입지정책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따라잡기형'의 성장에서는 전국종합개발계획의 개정으로 '대규모개발 프로젝트', '각종 장기구상의 비교', '정보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세 연구회를 중심으로 2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원안을 준비했다고 하며 이를 설명했다. 또 장래 산업구조의 전환과 더불어 산업배치의 전환과 그에 부수적으로 인구배치의 변화를 고려해 인프라 준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종장[경제지리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관계론적 전환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P. Vidal de la Blache 지리학의 잃어버린 반지(missing ring)에서 지역구조론은 Vidal의 지(구)적 유기체와 거의 같은 존재론적 출발점이었고, Vidal이 지역조직화와 관련된 로컬 관계만을 주목하고 일반적·보편적 관계의 쌍방을 모두 중시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보편적 관계에 대해 Vidal은 실증주의자로서 F. Ratzel과 같이 지적통일을 나타낸 지적 유기체론으로 설명해 이들은 우연하게도 개별구체적인 지역연구(monography)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Vidal은 동부프랑스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을 조직화한 방식이 로컬적인 관계에서 일반적·보편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종래의 일반법칙적인 자연환경 대신에 인간화된 역사적 환경, 즉 정치경제관계가 기축적인 지위를 차지해 가는

것이라는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Vidal과 같이 공업화나 도시화의 수반적 사실로서 정리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경제학과 지리학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은 다른가? 에서 경제학자가 가치를 과대하게 환원시키는 파리의 눈으로 본 세계를 포섭하는 메커니즘과 지리학자인 인간이 본 세계, 즉 다양한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채로운 지리적 경관을 특징짓는 경제지리학의 존재론적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추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라는 특수성에서 경제학의 연구가 구체화된 각 차원의 공간 또는 지역의 관점을 복원·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대해, 경제지리학은 경제현상이 갖는 공간적 형상에 착안해 그 형성, 변화, 소멸의 과정을 꿰뚫는 법칙성을 추구하는 과학이라고 했다. 그리고 종래에 경제학으로서의 경제지리학의 중심적인 주제로 이어온 경제지역론에서는 산업지역과 경제권의 정합을 갖는 엄밀한 의미의 경제지역이 관계론적 시점에서 본 일관된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와지마의 학설인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지리학의 위치 지움은 대상으로는 경제학, 방법으로서는 지리학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대상은 자본가적 상품경제이고 방법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리학으로서의 경제지리학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리적 현실'을 Polanyi나 Vidal을 본받아 하나하나 수집·검토해 거기에 숨어있는 패턴을 작업하는 것이 경제지리학의 재고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지리학 재고의 종장에서 경제지리학 제 학설의 내용들을 모두 언급하지 않은 채 매듭을 지은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초기논고 1[경제지리학의 방법에 질문한 각서]에서는 경제지리학, 지방재정학자의 지역적 불균형론 등 일본경제지리학의 학설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면서 야다의 국민경제의 지역전개를 위치 지으며 매개 향으로 입지론·배치론을 이용했다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야다의 지역구조론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

에서는 각 학과와 지역적 불균형론을 비판하며 산업지역과 경제권의 부정합의 지역구조론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것이 지역문제·격화를 가져오는 기본인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연구의 기준으로서 방법론적 지역주의<sup>7)</sup>의 어려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의 포섭형태,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발전단계(중상주의 단계, 자유주의 단계, 제국주의 단계)에 대응한 지역 차의 처리기구에 대해 언급했다.

초기논고 2['지역구조' 분석·序說]는 지역경제성장의 기존이론을 검토하고 초기논고 I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현상수준에서의 지역구조 틀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성장은 왜 일어나는가는 기본적인 원인 내지 여러 조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가는 성장경로를 명확하게 각각의 의미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성장이론에 대해 신고전파 모형, 발전단계설, 경제기반-비기반설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국민경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구조분석으로 G. Myrdal, A.O. Hirschman, J. Hicks 등의 이론적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경제력의 지역격차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 학설이 가진 어려운 점, 지역구조 분석으로 이론적 전환의 필연성에 대해 서술했다. 다음으로 경제기반-비기반설에 의한 지역구조론 재구성 시도에서는 지역구성(composition of region)과 여러 지역조직(system of regions)의 성격을 견비한 것이 완벽한 의미의 지역구조라 하고, 경제기반-비기반설에 의한 지역구조론의 재구성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입지계수, 국지화계수, 특화계수에 의해 지역구조의 골격이 되는 전국적인 산업의 입지와 배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이할당분석으로 지역구조의 현상분석을 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함은 산업분류와 대상기간의 설정인데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구조론을 마르크스경제학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저자의 사견도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補註는 지리학적 사고에 대해, 한정된

자본재의 전환가능성이 의미하는 것, '문제지역'론의 기초로서 야마나카(山中篤太郎)의 '문제성'론, 정책론 연구를 둘러싼 사회과학적인 태도에 대해, 그리고 마르크스의 '시간에 의한 공간의 부정'에 대해 기술했다.

이 책은 일본의 경제지리학을 이론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일시킨 야다의 자본주의 사회의 국민경제 지역구조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를 공간적 조직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민경제의 내부가 하나의 공간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지역과 공간이란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지역이란 용어 이외에도 장소, 관할영역(territory), 네트워크, 아상블라주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와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은 경제의 글로벌과 지식경제 등의 발달 및 무너진 지역경계로 세계경제의 공간관계론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韓柱成, 2017). 그리고 시장지역에 의한 공간적 조직화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유통경로에 의한 시장연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보론 중 초기논고가 약 80쪽으로 전체쪽수의 약 20%를 차지해 제I부와 제II부에 각각 나누어 기술하거나 각 부의 보론으로 했으면 한다. 그 이유는 제1장이 지역구조론의 새로운 전개로 초기논고 1과, 초기논고 2는 제II부의 국토정책론 재구축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역구조론은 산업배치론, 국토이용론, 지역정책론, 지역경제론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지역구조론의 틀과 지역정책론 만들 서술한 이유에 대해 불명확해 '경제지리학의 재고'라기 보다는 '지역구조론과 지역개발의 방법론적 재고'라는 책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도 경제지리학 성립 60년이 지난 이즈음 한국경제지리학의 학술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주

- 1) '시장지역'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를 온존하려는 경우도 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부단한 시장 확장과 그 시장의 확장이 조우한 운동, 즉 시장의 확장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저항운동을 진화와 반발로 반복하는 가운데 복잡하게 교착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 2) 다케우치(竹内啓一)가 지적한 바와 같이 戰前의 경제지리학은 '지정학'으로 기울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부정적 금기(negative taboo)로 해왔다.
- 3) 공동체 생활자로서의 인간에 기인한 생활의 공간적 통합을 말한다.
- 4) 인간사회의 공간적 이용에 대한 총체적 패턴으로 효과적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인간이 시도한 결과로 공간조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입지, 크기, 국가의 형상이다.
- 5)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선진 5개국 재무상과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첫째, 지나치게 높은 달러의 시정, 둘째 거시적·미시적 양 측면에서 각국 간의 정책협조와 그 실행, 셋째 상호감시(surveillance)의 필요성을 주 내용으로 한 긴급선언을 말한다.
- 6) 인프라 종류를 명확히 인식해 온 것을 따라잡기 시대라고 했다.
- 7) 지역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자명하게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韓柱成, 2017,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틀로서의 공간관계론," 대한지리학회지 52, pp.409-433.

교신: 韓柱成, 06374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1(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즈) (전화: 02-416-0316,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Remian Gangnam Hills apt., Jagok-dong, 101 Jagok-ro, Gangnam-gu, Seoul city, 06374 Korea (phone: 02-416-0316, e-mail: jshan@chungbuk.ac.kr)